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지식 콘텐츠 산업 동향 (요약)

경제 이슈: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 전략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퇴직연금

이슈: 노후준비와 연금활용

세심록

김연아에게 배우는 기업 경영

Book Review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월 광공업 생산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

-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3년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국내외 경기 부진 지속과 설 연휴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함
 -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2월 중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기계장비의 생산 급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10.1% 감소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동기대비 보험권을 유지
 - **경기 지수:**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했으나,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며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금융 동향: 시프러스 구제금융 등 유로존 악재로 국내금융시장도 하락

- 이탈리아 재선거, 시프러스에 대한 구제금융 논의 등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이 재차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소폭 하락함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월 13일 2.61%에서 3월 28일 현재 2.45%로 0.16%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북한 위협 지속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로존 위기 확산 등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3월 13일 1,099.5원에서 3월 28일 현재 1,112.0원으로 12.5원 상승
 - 코스피 지수도 글로벌 주요 증시의 하락세 등으로 3월 13일 1,999.7에서 3월 28일 1,993.5로 6.2p 소폭 하락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3/4	4/4	1/4	2/4	3/4	4/4	3/13	3/28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3.4	3.4	2.8	2.4	1.5	1.5	-	-
	산업생산(%)	7.2	5.3	5.3	4.2	1.5	0.3	1.2	7.7	-9.8
	소비자물가(%)	4.2	4.2	4.8	3.0	2.4	2.4	1.7	1.5	1.4
	실업률(%)	3.4	3.0	3.1	3.8	3.3	3.0	2.8	3.4	4.0
	경상수지(억달러)	54.9	126.7	69.0	25.6	111.4	145.6	149.4	22.5	27.1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1	3.60	3.45	3.39	2.88	2.81	2.61	2.45
	원/달러(원)	1,083.2	1,143.9	1,085.1	1,131.3	1,152.1	1,132.9	1,090.3	1,099.5	1,112.0
	코스피지수(P)	2,100.7	1,825.7	1,769.6	2,014.0	1,854.0	1,900.5	1,997.1	1,999.7	1,993.5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3월 13일은 1월, 3월 28일은 2월 수치임.

□ 지식 콘텐츠 산업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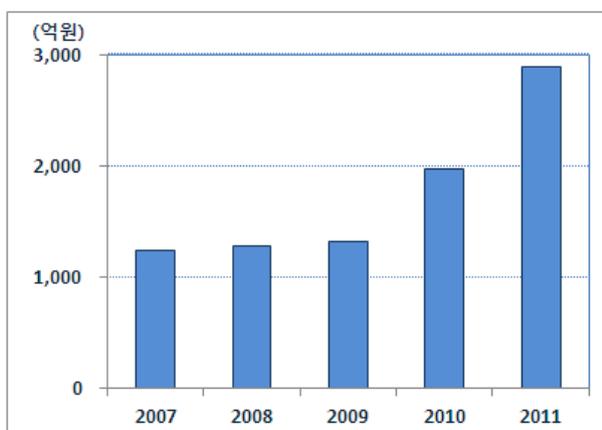
○ 범위

- 지식을 디지털 형태로 창출·공급하는 산업으로 전자출판과 e-learning을 포함
 -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크게 문화·오락 콘텐츠, 지식·정보 콘텐츠, 콘텐츠 솔루션으로 분류되며, 지식 콘텐츠는 지식·정보 콘텐츠에 포함
 - 지식 콘텐츠 중 전자출판은 e-book 을 비롯한 전자 출판물을 별도의 뷰어나 플레이어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산업을 의미
 - e-learning 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공급하는 산업을 총괄하며, 놀이와 학습이 융합된 형태인 에듀테인먼트 역시 e-learning 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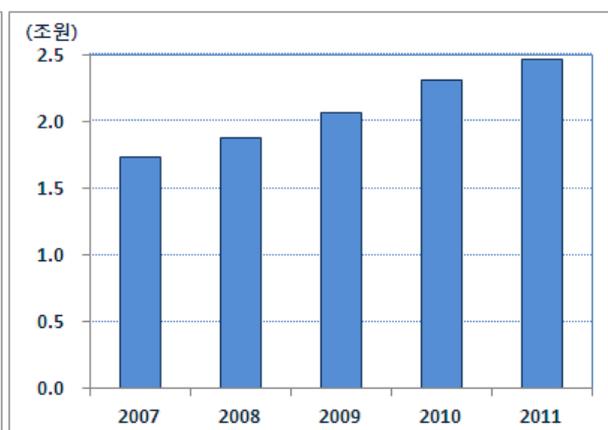
○ 시장 규모

- 2000년대 급성장한 다른 콘텐츠 시장과 달리 지식 콘텐츠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IT 기술 요건이 구축되는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부상 중
 - 2007~2011 년 한국 전자출판 시장은 연평균 23.7% 성장했으며, 2012 년의 시장 규모는 3,250 억으로 추정되며, 2013 년에는 5,838 억원으로 성장할 전망
 - 지식 콘텐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learning 시장은 2007~2011 년 연평균 9.1% 성장했으며 2012 년의 시장 규모는 2.5 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

< 한국 전자출판 시장 규모 >



< 한국 e-learning 시장 규모 >



자료: 한국전자출판협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 트렌드

- 지식 콘텐츠 시장의 성장 배경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 및 인구 구조의 변화
 - 2013년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출하 대수가 각각 데스크톱 PC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콘텐츠 이용의 시공간적 제약을 약화
 - 단기적으로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 수요 증가와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의 증가가 지식 콘텐츠 시장 성장을 견인

- 도시 인구의 증대와 배후 도시의 성장 등에 따라 소비 규모가 빠르게 확대
 - 전자출판 시장은 유통 플랫폼의 장악이 시장 선도의 열쇠가 될 전망으로 이미 대형 유통 및 출판사들과 중소형 디지털 업체들 간의 제휴가 활발한 상황
 - e-learning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역시 진입 중이며, 에듀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수출 역시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주요 기업 동향

- IT.통신 업체들은 기존의 자사 경쟁력을 활용하여 전자출판 유통에 진출
 - 두산, 교보문고 등 기존의 출판 및 유통 업체 외에 SK 텔레콤, 삼성전자, 네이버, Google이 한국 전자출판 시장에 진입

- 특히 통신업체들은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의 대안으로 e-learning 시장에 주목
 - 이미 자회사를 설립한 KT는 2013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SK 텔레콤은 스마트 기기, 전자출판, e-learning을 포괄한 스마트러닝 사업을 계획 중

□ 경제 이슈: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 전략

- 3대 활성화 분야와 5대 추진 방안 제언

○ 창조경제의 의미

- 새 정부가 5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함으로써 이의 개념과 내용, 실현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제시된 경제발전론 측면에서 보면 창조경제의 협의 개념은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뜻한다. 광의 개념은 비수렴(비혁신) 함정론, 경제발전단계론, 내연적 성장론에서 제기하는 경제 전반의 성장 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전략 또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만 의존하던 개도국형 추격 중심의 외연성장(Extensive Growth) 체제에서 인적자본, 기술혁신력 등에 기반을 둔 선진국형 선도 중심의 내연성장(Intensive Growth)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특정 산업 육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창조경제에 해당한다.

○ 창조경제 부상의 배경

- 창조경제의 부상의 당위성은 인간심리론적 측면에서의 인간 욕구 증대론, 대외 환경 변화면에서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대내적인 측면에서 국내 경제 침체라는 세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 증대를 들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 예술 등 창조산업 발전의 토양이 형성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로 인해 창조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기술산업의 융복합화 확산 등으로 제3의 제조업 혁명 등이 전개되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일으키는 창조경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창조경제 실현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국내 성장률은 현재 1%대까지 하락했으며, 생산과 고용의 연계 약화 등으로 고용창출력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투자와 노동 등 투입 요소 증가세 둔화,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경쟁력 취약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부진하여 잠재성장률도 빠르게 하락하는 중이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언

- 새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 41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 경제의 창조성을 보다 성공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중심이 된 수요와 제도적 측면에서 세 가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정보통신 등 첨단 과학기술을 매개로 모든 산업에서 융복합이 원활히 실현되어 신사업이 활발하게 창출되어야 한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 더 많은 수익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한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과 창의 정신이 왕성히 살아날 수 있는 경제사회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 방안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기보다 이전 정부의 투자 노력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왕성한 투자와 창업을 위한 '기술거래'와 'M&A'와 같은 창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창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엔젤 투자와 같은 창조금융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창조경제의 주체인 기업이나 개인들의 창발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파와 공교육 혁신과 같은 경제사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창조경제는 종합적인 경제 성장 전략의 변화이므로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성과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bkyoo@hri.co.kr, 2072-6210,)

□ 경제 이슈: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 한국 창조경제역량, OECD 국가 중 20 위

○ 창조경제역량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 창조경제역량지수란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역량 즉, 창조경제역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창조경제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인적자본(9개 지표), 연구개발혁신자본(9개 지표, 이하 혁신자본), ICT 자본(8개 지표), 문화자본(9개 지표), 사회적 자본(11개 지표)과 같이 경제전반의 창조역량을 제고시키는 5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산출방법은 최고 수준을 10으로 하여 모든 개별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개별 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1개국이다.

○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로 OECD 31개국(이하, OECD) 평균 6.3을 다소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1개 국가 중 20위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G7 국가와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인데 반해 OECD 평균은 6.3, G7 평균은 6.6으로 나타나, G7과의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이 ICT 자본을 제외하면 모두 G7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ICT 자본은 OECD 중 최고 수준, 혁신자본은 상위권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ICT 자본은 OECD 중 1위, 혁신자본은 11위 수준으로 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역량지수는 각각 6.5, 3.7, 6.7로 OECD 평균 7.3, 4.7, 7.5를 하회하여 각각 22위, 29위, 21위 수준이다. 특히 문화자본은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자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문화자본역량을 구성하는 9개 요소 가운데 유일하게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세계문화유산(을 제외하면, 투입 부문의 2개 요소(가계 지출 중 오락 및 문화 비중, 정부예산 중 여행 및 관광 지출 비중), 인프라

부문의 3개 요소(세계 자연유산 수, 관광산업 발전 지속성, 관광인프라), 성과 부문의 3개 요소(관광 수지비, 외국인 관광객 수,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의 무역 수지비) 등 총 8개 요소들이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부문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31개국 가운데 1위(ICT 자본)부터 29위(문화자본)까지 순위차가 심하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G7 국가들의 부문별 창조경제역량지수가 중상위권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섯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부문 내 격차도 상존한다. 혁신자본과 같이 31개국 중 11위로 비교적 상위로 평가된 요소조차도 벤처캐피털의 이용성이나 기술무역 수지비와 같은 지표들은 OECD 평균을 하회하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OECD 1위 수준인 ICT 자본에서도 정보기술력과 같은 인프라 지표가 20위권에 머무는 등 부문 내에서도 심각한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 시사점

- 국내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창조경제역량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가운데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혁신자본과 ICT 자본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ICT 자본의 고도화, 혁신자본의 창조경제역량 기여도 제고, 혁신자본과 ICT 자본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역량 구성요소 간 융합 촉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문화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자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의 원천적 경쟁력 제고,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개인 또는 집단의 창조성 발현 가속화, 문화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극대화 전략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충 등의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추진 일관성 유지 및 창조경제 구성요소들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수석연구위원(leeboh@hri.co.kr, 2072-6306)

정민 선임연구위원(chungm@hri.co.kr, 2072-6220)

□ 이슈: 노후준비와 연금활용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노인의 소득 중 자녀지원 등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이 가장 크다. 그러나 근래 들어 개인주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의 노인부양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은퇴 후 다른 노후 소득을 창출하기도 쉽지 않다. 다른 금융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사실상 연금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금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 너무도 흔하게 들어서 그 중요성을 혹시나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부각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직면하여 국내 연금제도를 이해하고,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연금 활용 등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 노후소득보장 문제와 연금시스템

○ 의학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개인의 평균수명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노후소득보장 문제도 함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먼저 청년취업난 등으로 소득창출 시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인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창출 마감 시점이 짧아지면서 소득발생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음
- 과거 경제성장률이 높던 시절에는 잘만하면 환갑을 넘어 육십 대 중반까지도 일을 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요즘 정년퇴직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사회적 흐름과 분위기로 판단해 본다면 55 세 전후가 고작임
-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효율화의 차원에서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기 때문임. 이에 따라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등 각 연령대별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신조어가 생겨나오고 있음
- 소득창출 기간을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 peak 제 도입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은퇴 후 다른 노후 소득을 창출하기도 쉽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노인의 소득 중 자녀지원 등 사적(私的)이전에 의한 소득이 가장 큼
- 그러나 전통적 가족부양체제 붕괴, 소득발생 기간 축소 및 노인취업의 어려움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되면서 자녀지원 등과 같은 사적이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은 매우 불투명해졌음

-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 혹은 편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구성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효에 대한 인식 변화, 개인주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의 노인부양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 즉, 효에 대한 인식 변화, 자녀의 보험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따라서 자녀지원 등과 같은 사적이전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다른 금융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연금밖에 없는 게 현실임

□ 연금이란 노령사회를 대비해 근무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정기적인 금전 지급임

-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연금시스템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은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1 층에 국민연금이 자리 잡고 있음
- 보통 회사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됨. 법적 제도를 정해 회사를 다니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등도 노후생활 보장의 개념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2 층에는 표준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이 있으며 연금의 최상층인 3 층에는 개인이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물론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따로 자기들의 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음

< 국내 연금시스템 >

3층	사적연금	(개인연금) - 보험사(생명.손해), 은행, 자산운용사	
2층		(퇴직금 및 퇴직연금) - 퇴직금이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	특수지역 연금
1층	공적연금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 - (지역) 사업장 가입 이외 - (임의)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 이외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등

□ 국내 연금제도의 현황

○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내 연금시스템은 매우 취약

-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공적 연금시스템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절대적으로 미흡
- 노령자들의 인간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한정될 만큼 공적 사회복지 여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더군다나 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보험료부담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 출산이 연금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연금을 내야할 사람은 적는데 받을 사람은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함
- 뿐만 아니라 근로세대 인구(18~59 세 인구, 32,793 천명) 중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死角地帶) 규모는 전체의 54.2%에 이릅니다
- 즉, 근로세대 인구 전체에서 비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비적용자, 납부예외자, 체납자를 제외한 특정시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적용자 규모는 4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공적연금이 불안하다면 사적연금은 사정이 좀 나은가? 안타깝게도 현재 사적 연금은 공적연금보다 더욱 취약한 편임

- 먼저 연금의 2 층 구조에 위치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자. 1953 년 5 인 이상 일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에 퇴직금 제도라는 게 생겼음
- 하지만 현행 퇴직금제도는 현실적으로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 중간정산제 도입 등으로 노후보장 소득제도로서는 유명무실함
-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2005 년 12 월 정부는 선진국형 기업연금과 같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제도와 달리 5 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10 년 이상 일정 금액을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55 세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샐러리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는 실질적 효과가 없음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 비교 >

	퇴직금제	퇴직연금제
지급형태	일시불	일시불 또는 연금
적립방식	사내적립	사외적립
퇴직급여 보장	불안정	안정적, 전액보장 (단, 운용손실은 개인에게 있음)
이직시 승계	불가능	쉬움
세제혜택(근로자)	일시금 퇴직소득 과세	연금 수령 때까지 유예

○ 그렇다면 개인연금이라도 들어야 할 텐데 과연 개인연금 또한 상황이 좋지 않음

- 연금 시스템 도표의 3 층을 위치하는 개인연금의 경우 비록 민간금융기관의 상품 판매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초기 단계
- 현재 은행, 보험, 자산운용회사들이 각종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 층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연금 또는 일시불로 받는 형태
- 그러나 저금리가 지속되면 저축성 개인연금의 배당률이 급격히 낮아져 개인들은 개인연금 역시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소득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강구하게 되면 개인연금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연금은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각기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여건에 맞는 개인연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절실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공.사적 연금자산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원으로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미흡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는 제도 도입이 일천하여 적용 사각지대가 넓고, 급여수준도 낮다는 지적(여기에 재정안정 문제 등으로 인해 급여수준은 향후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피할 수 없음
- 사적연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입탈퇴가 자유로워 노후소득원으로 기능이 매우 희박하다는 문제가 존재

○ 공.사적 연금소득 수준을 통해 적정노후소득 수준을 달성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소득대체율(은퇴 이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OECD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경우도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치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약 60% 수준이 적정 노후소득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겨우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국내 연금제도 하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충실한 사적연금의 보완을 통해서만이 달성할 수 있음**
- 즉, 40 년을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수준 달성은 부족하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임
 -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을 평균소득가입자(월 200 만원) 기준으로 60% 수준이라고 할 경우 국민, 퇴직, 개인연금 모두 30년 가입 시 합산소득대체율은 56.21%, 모두 35년 가입 시 66.10%가 됨
 -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 기간의 근로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냐의 문제와 동 기간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소득원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함
 - 즉, 현실적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적정(목표) 노후소득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득원으로는 0 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5 층의 자산까지 매우 다양하게 고려해야 함**
- 그러나 이들 소득원이 내실 있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함
 - 기초노령연금의 보장범위(전체 노인의 70%수준)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월 9 만 4 천원 수준) 보장성이 약하고, 기타소득, 자산 등은 일부 부유계층에만 존재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이 되지 못함
 - 따라서 개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제 2 의 직업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근로기간을 늘리거나(4 층),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한 주택연금(5 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

소득원		피고용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자산	5층	자산매각 및 역모기지		
소득	4층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추가연금보장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금·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차 안전망 (공적연금 등)	1층	국민연금		군인연금
최종안전망 (빈곤선)	0층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택연금의 활용

○ 노후생활을 위해 역모기지론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 또는 주택이전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 과거 국내 일부 민간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론과 유사한 상품이 도입되어 판매되었으나 국민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판매가 부진
- 국민 정서상 주택은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너무나도 강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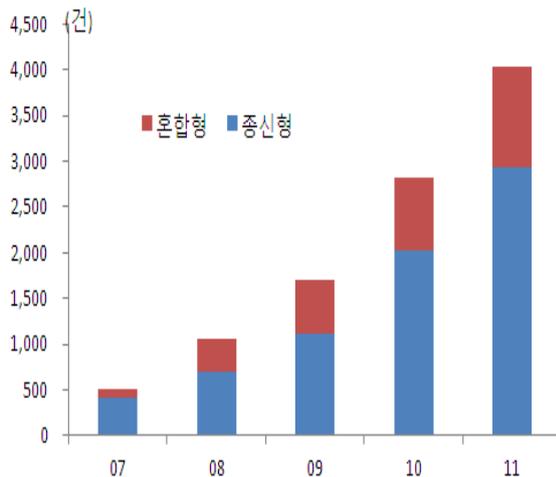
모기지론 vs 역모기지론

모기지론은 젊었을 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역모기지론이란 늙어서 노후생활을 위해 자신의 주택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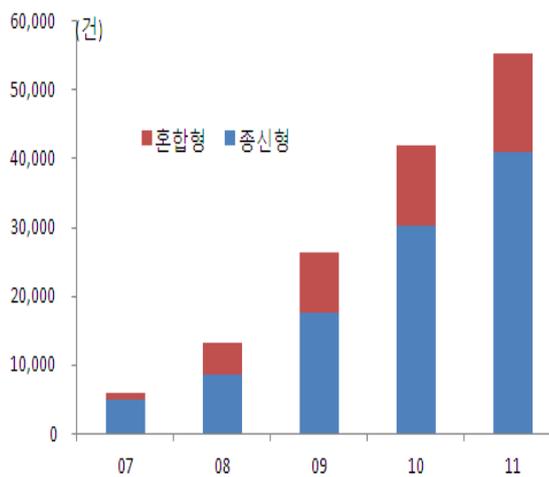
	모기지론	역모기지론
목적	주택구입	노후생활 (생활비, 주택수리비 등)
주 이용자	20~30대의 소득자	60대 이후의 노후생활자
대출	계약시 일시에 발생	사망시까지 매월 발생
대출 기간	대출기간 확정	사망 (주택이전시) 대출종료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주택처분 후 원리금 일괄상환
대출금	대출금 감소	대출금 증가

-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역모기지 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난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의 역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어 고령화 및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주택연금(혼합형과 종신형)의 경우 2007년 515건에 그쳤던 계약건수가 2011년 2,936건으로 증가하면서 2011년까지 총 7,286건을 기록하고 있음
- 여기서 종신형이란 피보증이 생존하는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하고, 혼합형은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이내에서 피보증이 수시로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는 개별인출을 결합한 방식을 말함
- 지역별로 서울 및 경기 등 약 88% 이상 편중되어 있으나 점차 지방에서도 인식의 변화로 확대되는 추세임
- 2010년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는 월평균 수입액이 137만원이며, 이 중 70%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위해 주택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주택연금 가입 추이 (건수) >



< 주택연금 가입 추이 (금액) >



자료 :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종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담보로 맡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음
- 주택연금 제도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그러면 '주택연금'은 어느 정도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가? 6억원 이하 중 평균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시가 3억원 집을 예로 들어보면,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1 년말 현재 3 억 원짜리의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가입 당시 연령이 65 세면 죽을 때까지 80 만원 이상을 매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계산은 여러 변수들이 변할 때 생기는 위험을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도록 짜여 있음

- 그러나 만일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거나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월 지급을 조정할 경우 그 지급 가능액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택연금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이런 주택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금리 및 주택 가격이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에게서 한국형 '주택연금'이 필요한 실정임

- 예를 들면,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게 어느 정도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되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식들이 떠안도록 하는 방법임
- 비록 효에 대한 전통적인 신뢰가 점차 퇴색되고 있지만, '부모 부양'이라는 전통적 정서를 가미한 한국형 '주택연금'으로 보완된다면 '주택연금'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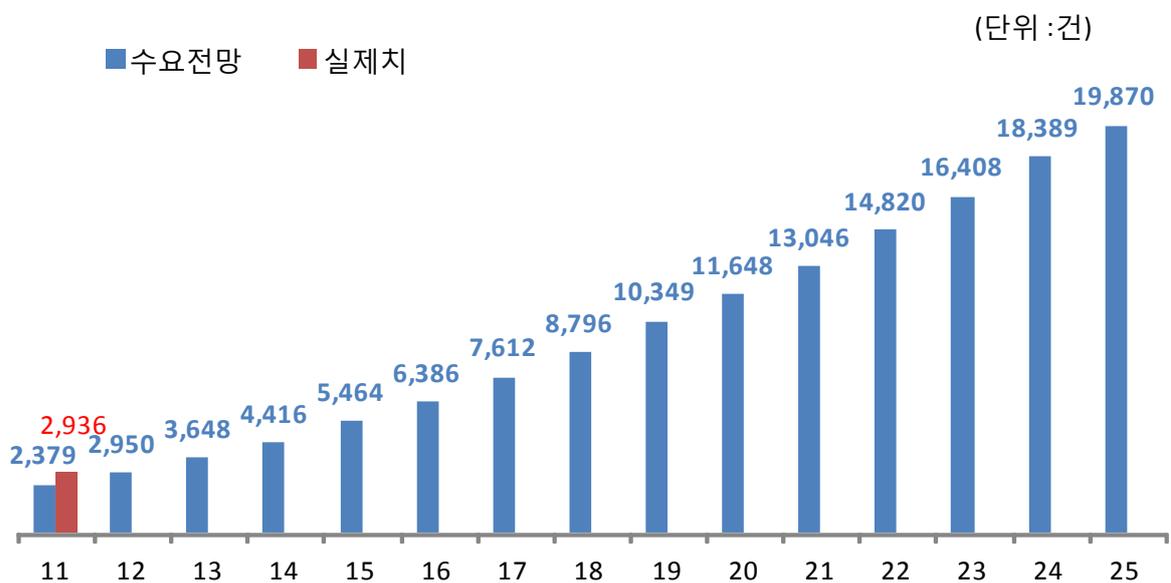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특별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이용이 매우 절실함

- 특히 주택만 있을 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많아 주택을 활용한 노후소득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가계금융자산' 통계에서 2010 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비중은 42.4%임
- 점차 역모기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도시 생활자들의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전환되고 있음. 주택은 소유 개념에서 쾌적한 생활을 위한 주거의 역할과 자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자산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2010 년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1.9%이며, 전국 자가주택의 비중도 60%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주택의 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임
- 주택 가격이 충분히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통한 금융부채의 조달이 단순한 담보가치에만 머무르고 있음
- 유동성이 높은 아파트 비중이 높아(2010 년 조사 60% 근접)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한 표준화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역모기지가 빨리 발달할 수 있는 환경임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 추정을 보면 향후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앞으로 주택연금이 본격 활성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를 대비하여 내 집을 장만할 때, 항상 '주택연금'도 같이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음

- 모든 주택이 다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특히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것을 고려한 경우 일부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은 주택연금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임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신규수요 추정 >



자료 : 주택금융공사의 2010 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덕배(02-2072-6216, dbpark@hri.co.kr)

□ 洗心錄

□ 김연아에게 배우는 기업 경영

여제(女帝)의 귀환에 세계가 열광했다.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최고가 되는 과정은 기업경영과도 매 한가지인 듯싶다. 김연아가 보여준 빙판 위의 예술을 되짚어보며 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견주어보자.

첫째, 기본에 충실하라. 김연아가 수년의 공백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체력이 뒷받침됐고 점프의 교과서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기존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견고히 한 후 이를 확장해가며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전략이 같은 이치다.

둘째, 강점을 전략화하라. 김연아는 자신만의 점프 기술을 갖춰나가며 경쟁력을 키웠다. 이에 반해 아사다 마오는 트리플 악셀이라는 고난이도 기술에만 매달린 게 패착이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전략화하기보다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셋째, 몰입의 경지를 이뤄라. 아사다가 끊임없이 경쟁자를 의식하는 추격형 전략을 추구할 때 김연아는 강력한 집중력으로 자신을 향한 싸움을 해왔다. 남을 의식하다보면 성공보다는 실수에 집착하게 된다.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강력한 추진력으로 온 집중을 다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넷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김연아는 바뀐 심사 규정, 현지 심사위원 취향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시도했다. 기업 역시 제품의 질은 물론이거니와 틈새시장을 찾고 고객 특성이나 현지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김연아가 최고가 되기까지는 호된 시련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이제 김연아 이후, 포스트 연아가 중요하다.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역시 같은 이유다. 조직의 리더라면 스케이팅도 한 번쯤 배워볼 만한 것 같다.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무게 중심을 찾게 하는 선물이다.
(Challenges are gifts that force us to search for a new center of gravity)

오프라 윈프리(Oprah Gail Winfrey)

□ Book Review

□ 도서 및 저자 소개

- 제목 :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 저자: 진노 나오히코

. '나눔의 경제' 주창자이자 도쿄대학 명예교수
 . 재정학 전공자이며, 현재 지방재정심의회 회장

. 저서: <인간 회복의 경제학>,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희망의 섬을 향한 개혁> 등



□ 주요 내용

○ 왜 지금 나눔을 말하는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격차와 빈곤이 확대

- 의도된 고용 파괴: 저임금, 해고의 용이함, 사회보장 부담 감소 등을 이유로 기업이 비정규직 선호
- 파괴된 인적 환경: 자연환경이나 인적환경은 시장의 힘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공공재

○ 일본이 2차대전 후 '황금의 30년' 동안 격차나 빈곤 없이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비밀은 기업과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

- 1973년 이전의 일본은 '큰 기업, 작은 정부, 작은 노동자'로 특징 지워지나 신자유주의는 아니었음
- 일본 기업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 기업별 조합 등으로 복지국가의 고용보장 기능 및 생활보장기능을 흡수

○ 일본식 경영이 한계에 봉착하자 1973년을 '복지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부담·고복지를 꺾었으나 세계적인 복지국가 해체 흐름으로 다시 작은 정부로 전환

- 일본은 '가족이 사회보장을 지탱하는 국가'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이미 가족, 근린, 직장 등에서 연대와 상호부조가 쇠퇴했기에 빈곤과 격차는 심화
-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아 1990년대 후반 '격차사회'라는 지적이 고조됨

○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나눔'의 경제

- 생산과 생활의 분리: '생산'은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경제로 영위되나, '생활'은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협력원리에 기초한 나눔의 경제로 영위됨

- 인간을 재생산하는 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이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한 조직이라면, '사회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은 나눔의 조직
- 경쟁과 나눔의 적절한 균형: 미래를 열어나가려면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경제 영역과 나눔의 영역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수적
-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가난한 사람에게만 현금을 급부하는 '수직적 재분배'에서 복지, 의료 등 소득에 관계없는 '수평적 재분배'로 전환 필요
- 지금이 나눔을 재편성할 때: 공업사회가 지식사회로 전환해감에 따라 사회시스템의 나눔을 정치시스템에서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

○ '재정'이란 공동의 어려움을 공동분담을 통해 공동책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나눔의 경제를 의미함

- 사회적 지출 비중이 높고 세율이 높은 스웨덴은 재정수지가 흑자고 경제성장률도 높음
- 증세에 대한 저항감의 실체: 세금을 나눔이 아닌 쓸모없는 지출에 사용하기 때문에 증세에 응하지 않는 것

○ 나눔의 경제는 경제성장과 빈곤·격차 억제를 동시에 달성

- 유연안정성 전략: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임과 동시에 생활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 노동시장 탄력화, 관대한 생활보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워크페어 국가로 전환: 산업구조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숨페터식 워크페어 국가'라 함
- 덴마크나 스웨덴 등은 복지를 워크페어, 즉 '일하도록 하기 위한 복지'로 발전시키고 있는 모범 사례
-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동권화', '사회보장의 동권화', '노동시장 참가의 동권화'가 필요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